

출범하기도 전에 빛부터 떠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도 요구 통합준비 비용...정부 추정 반영 '0원' 지방채 발행 압박...행정시스템 통합 등 차질 우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앞서 선행돼야 할 행정통합 준비작업과 관련해 정부가 예산 지원에 난색을 표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1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그렇다고 행정통합 준비작업을 미흡하거나 소홀히 하면 지역민이 상당한 혼란과 불편을 겪을 것이 자명한 상황이며, 행정통합 첫 광역행정통합체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빛부터 타고 첫 발을 내디게 됐다.

지난 10일 국회는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 지원 등을 위한 26조2000억원(총

지출 기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업(4조8000억 원) 등이 담겼다.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을 위한 예산, 대중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기 위한 예산, 나프타(납사) 수입단가 차액 지원 예산, 농어업 유가 지원예산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요구한

행정통합 지원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과 관련해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청사 재배치, 통합 시의회 구축, 공공시설물 정비 등에 필요한 576억 원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남도 교육청의 교육행정통합에 필요한 920억 원 등을 합치면 모두 1496억 원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소관 업무인 광역행정통합과 관련해 당장 정부 예산 편성이 어려우니 광주시와 전남도의 지방채 발행을 보증한 뒤, 나중에 이를 인수해 주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7일 안도걸 의원의 전남광주 행정통합 지원예산 요구에 대해 "전남광주에 지방채 발행을 보증하는 형태로 일단 지원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지방채 발행으로 지게 된 빚을 국가 예산으로 탕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통해 탕감비용을 빌려주겠다는 뜻을 지자체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빚을 내서 통합준비를 하려는 얘기인데, 이 빚은 고스란히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부채로 전가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고 시도가 당장 빚을 내지 않을 수도 없다.

예산이 제때 지원되지 않으면 광주시와 전남도의 '정보시스템 통합'의 경우, 통합 시 출범 직후부터 행정 시스템 마비 등 큰 피해가 우려된다.

당장 각종 증명서 발급이 어려워지고, 민원접수와 처리는 물론 행정 전자결재서 비스도 중단되며, 지방재정시스템이 마비

돼 지방세 부과,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이 차질을 빚게 된다.

또 당장 시도 통합으로 인해 지적도나 각 지구에 대한 공식기록장부나 공공시설 표지체계도 바뀌게 되지만 바뀐 지적도와 표지체계가 현실과 괴리되면서 혼란과 피해가 현실화된다.

게다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은 광역단위 행정통합의 첫 사례여서 당장 눈에 띄는 시행착오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1986년 광주 직할시 승격으로 분리된 이후 40년 만의 재결합이 자칫 준비가 소홀하면 단순한 혼란과 피해를 넘어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끝까지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에 필요한 통합비용을 외면할 경우 대비해 지역 정치권 차원의 대응도 필요해 보

인다.

이 문제를 어둠쯤 넘기면 이후 이와 유사한 정치적 해석이 필요한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갈등을 빚는 것은 물론, 정부가 약속한 매년 5조 원의 예산 지원의 사용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혼선이 초래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행정통합비용도 정부가 매년 5조 지원 예산에서 충당하라며 미룰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통합은 지역 사업이 아닌 국가가 결정한 사업"이라며 "국가 최종 행정통합을 했고, 실제로 작동시키기 위해 기초 인프리를 세우는 예산은 당연히 국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오전 시청 광주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응급환자 이송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청

김민석 총리, 광주·전남 응급의료 현장 대응 체계 확인

“지역별 의료 자원 형태 달라...전남 상대적 취약”

광주·전남에서 시행 중인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운영 현황 점검에 나선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역별 의료자원을 분석하고 전남에 대해 상대적으로 취약해보인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김 총리는 지난 10일 광주 동구 전남대 병원에서 열린 광주·전남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 현황 간담회에 참여해 "전남의 의료 자원이 조금 더 취약한 상황으로 보인다. 광역상황실에

바로 연락을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빈도도 조금 더 높은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광주와 전남·전북을 시범 사업 지역으로 3개월간 지정하면서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권역별 (의료) 자율성과 특성이 광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의료 자원의 형태가 다르고 그에 맞는 현실적인 방안을 자율적으로 찾

고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또 "2차 응급 처치를 담당하는 우선 병원을 지정하는 것 또한 공통 개선 방안으로서 의미가 있어 보인다"며 "각각의 단계가 어떻게 되면 광역상황실의 작동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간담회가 통합 조직 개편의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총리를 비롯해 이형훈 복지부 2차관, 주영국 소방청 119대응국장, 고영국 광주소방안전본부장, 이근배 전남대총장, 정진 전남대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광주시청 내 광주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을 둘러 현황보고를 받고 응급환자 이송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성오 기자 goback@gwangnam.co.kr

도, 정부양곡 전수조사·쌀 수급 관리 강화

보관·가공·수송 전 과정 재고 조사·품질 동시 관리

전남도가 정부관리양곡의 정확한 재고 파악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상반기 정기 재고조사에 착수했다.

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재고량을 정밀하게 확인하고, 향후 쌀 수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착오나 부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췄다.

조사는 3월 31일 기준 재고를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진행된다. 양곡보관창고에 보관된 물량은 물론 가공공

장 재고와 가공 중 물량, 수송 중 양곡까지 포함해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실시된다.

조사 신뢰도 확보를 위해 시군별 조사반을 편성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 방식이 적용된다.

재고량 확인뿐 아니라 품위와 보관상태, 창고시설 적정성 등 관리 전반을 점검한다. 도는 조사 기간 동안 주요 보관창고에 대한 현장 점검도 병행해 재고 불일치와 품위 저하, 보관 부적정 사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 즉시 보완·시정 조치에 나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ews1@gwangnam.co.kr

광주도시공사, 상반기 신규직원 25명 뽑는다

학력·성별·거주지 등 제한 없애 행정직 13명·기술직 12명 선발 사회 보호계층 전형 별도 운영

광주도시공사(사장 김승남)가 상반기 신규 인력 25명을 공개 채용한다.

광주도시공사는 행정직 13명, 기술직 12명 등 총 25명을 선발하는 '2026년 상반기 신규직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행정직은 기획·총무·회계 등 경영 지원 업무를 담당하며, 기술직은 건축(1명), 토목(2명), 기계(4명), 전기(2명), 조경(1명), 환경(1명), 지적(1명) 등 분야별 시설 시공·관리 및 운영 업무를 맡는다.

원서 접수는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30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지원자는 광주 공공기관 통합채용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채용 절차는 오는 5월 30일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6월 15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6월 16일부터 23일까지 서류접수, 26일 서류 합격자를 가린다.

이후 7월 1일 인적성 검사와 3일 인적성 합격자 발표를 거쳐, 8일 면접시험을 진행하고, 1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광주도시공사는 모든 응시자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학력, 성별, 거주지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 전면 블라인드 방식을 적용한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회 보호계층의 공직 진출을 돕는 구분모집을 실시한다.

행정직에서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2명을 별도 선발하며, 기술직에서는 장애인 2명(기계 1, 전기 1)과 보훈대상자 2명(토목 1, 기계 1)을 할당해 지원을 지원한다.

양동민 기자 yang00@

정청래, 6·3 지선 재보선서 “전 지역에 후보 전략공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해 “전 지역에 공천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지난 10일 전남 담양농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후보는 전 지역에서 다 출마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보선이 열리는 지역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면 안 된다는 조국혁신당의 요구에 선을 그은 것으로, 혁신당 조국 대표가 출마하는 지역에도 민주당 후보를 내겠다는 취지다.

앞서 혁신당 정춘호 최고위원은 지난 2월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전북 군산에는 민주당 후보를 공천해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행안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세부전략 수립 착수

광역단위 행정통합 첫 사례...“선도모델로 정립”

행정안전부가 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운영 청사진 마련에 착수했다. 광역 단위 행정통합이 실제 결실로 이어진 첫 사례인 만큼, 이를 지방분권 선도 모델로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1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행안부 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은 최근 '광역시·도 행정통합 세부발전전략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통합 이후 행정·재정·관한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후속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달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다. 1986년 광주 직할시 승격으로

분리된 이후 40년 만의 재결합으로, 현재 정부와 양 지자체는 7월 1일 공식 출범을 목표로 조직 통합과 자치법규 정비 등 실무 절차를 진행 중이다.

행안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통합특별시 내부 구조를 정밀하게 설계할 계획이다. 시·군·구 단위 인구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활용해 성장 거점과 소멸 위험 지역을 구분하고, 권역별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도출한다. 이를 토대로 중심 도시와 주변 지역 간 역할을 재배치하는 공간 전략이 마련될 전망이다.

자치권 확대도 핵심이다. 정부는 통합 특별시에 폭넓은 권한을 부여해 지방분권 실험 무대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복지

등 주요 정책 분야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광주·전남이 각각 추진하던 사업을 전수 분석해 통합 이후 시너지 사업으로 재구성할 계획이다.

제도 정비 작업도 병행된다. 통합특별시 운영에 필요한 권한 이양과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도 함께 검토한다. 행정·재정·조직 전반에 걸친 체계 재설계가 동시에 추진되는 셈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례 없는 광역 행정통합인 만큼 운영 단계에서의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연구 결과는 향후 지자체가 추가 정책을 설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정부, 무안공항 참사 현장 전면 재수색 추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재수색이 추진된다.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미수습 유해를 찾기 위해 사고 현장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정밀 재수색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국토교통부가 12일 밝혔다. 재수색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약 두 달 간이다.

사고 현장에서 희생자 유해가 뒤늦게 추가로 발견되는 등 초기 수습이 미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유가족들과 협의를 거쳐 사고 현장 및 주변 지역을 전면 재수색하기로 결정했다.

사고가 난 둔덕을 중심으로 무안공항

내부뿐 아니라 외곽 담장 주변, 활주로 진입로 등 공항 주변 지역도 포함된 재수색이 진행된다.

이번 재수색에는 경찰과 군 각 100명, 소방 20명 및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와 전남도·무안군·유가족 등 30여명을 비롯해 민·관·군·경에서 모두 250여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민간 발굴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발굴·감식 교육을 시행하는 등 유해와 유류품을 빠짐없이 수습하는 데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